

하루를 시작하며



고 나 해
시인

기후가 달라지면서 제주 농업의 풍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기온으로 익숙했던 기존 작물들이 흔들리는 반면, 변화된 제주 기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작물도 있다. 필자가 재배하는 ‘여름 두릅’도 그중 하나다. 육지에서는 냉해와 동해, 여름철 고온피해가 만만치 않지만 제주에서는 여름 생산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문제는 생산 다음이다. 농산물은 생산할 수 있는데 육지로 보낼 길이 마땅치 않다.

여름 신선농산물은 수확 후 시간

기후는 변했는데 제주 물류는 제자리걸음인가

이 신선도와 상품 가치를 좌우한다. 하루 수확kg을 수확해도 개별 농가의 물량만으로 별도의 운송체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대량 출하되는 기존 작물의 물류망에 함께 신지 못하면 소량 농산물은 갈 곳을 잃는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아도 제때 보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물류비 부담 이전에 ‘안정적인 운송망의 부재’ 때문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긴다.

최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주도청 관련 부서와 긴 통화를 했다. 그러나 대화를 거듭할수록 소관별로 나뉜 ‘간막이 행정’의 한계가 선명하게 보였다. 제주에는 소규모 물량을 모아 운송비를 절감하는 공동물류 지원사업이 있고, 새로 조성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있다. 그러나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현재 제조업체 중심으로 운영된다. 농산물

유통은 별도의 담당 부서와 농협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일지 모르지만 다품종 소량 신선농산물은 그 경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담당 부서가 어디냐가 아니라 오늘 수확한 농산물을 제때 시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농민이 무작정 지원금을 더 달라하는 것도 아니다. 필자 역시 계통출하 과정에서 kg당 2000원이 넘는 출하 관련 비용을 감수하면서 육지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보냈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좋으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선 물류망’의 길부터 열어 달라는 것이다.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다. 제주 동서남북의 기존 농협 집하장과 활용 가능한 산지유

통시설을 신선농산물 공동집하거점으로 연결하고, 이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항공·해상 냉장 운송망으로 이어주는 체계를 만들면 된다. 핵심은 시설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설과 물류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물류비 ‘거리 등가제’ 도입 검토와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반가운 움직임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주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작목을 찾아 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을 제때 시장에 보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후가 변했다면 작목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물류도 변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제주 농정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사설

‘쌈짓돈’ 전략한 4·3 보상금, 정부 변칙 운용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을 타 용도로 전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타 용도 전용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집의에서 4·3 피해보상금의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을 질타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까지 4년간 4·3 피해보상금 중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됐다. 2025년에는 행안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에서 충당했다. 문 의원은 “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에게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전용한 것은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

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형사보상금 집행액이 2022년 281억원에서 2025년 1084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법무부는 2025년 본예산에는 420억원만 편성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다른 사업에서 425억원을 전용하고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형사보상금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4·3 피해보상금은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스러져간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다. 희생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되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피해보상금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피해보상금을 제때 지급해야 한다.

재해보험 사각지대 내몰리는 당근 농가들

제주지역 당근 재배농가들이 정부와 농협손해보험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제주시 구좌읍 등 당근 주산지에서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파종 후 싹이 제대로 트지 않거나, 이달 중순 집중호우로 씨앗과 흙이 함께 쓸려 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재해보험 가입 기준인 출현율(발아율) 80%에 미치지 못해 약 20%는 보험 가입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씨앗 파종 작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파종과 동시에 가입 가능했던 당근의 재해보험 가입 시점을 2025년부터 출현율 80%로 강화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작물마다 파종 시기와 생육 특성이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농가에

서도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이 변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특히 당근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한여름이 파종 시기인데 다른 밭작물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까지 도내 당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일부 농가의 품목 전환도 있었지만, 출현율 8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을 위탁 판매하는 농협손해보험은 형평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이 달라진 기후와 지역·작물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야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난 상황에서 농업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스마트 건강관리,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부 지 숙
제주시 서부보건소 주무관

건강 이상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많고 모든 대상자를 자주 찾아가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어르신들은 작은 변화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현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다.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면 방문의 장점을 살리면서 정보통신기술로 주민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사업이다.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필요시 재방문과 연계까지 이어갈 수 있다.

또 주민 스스로 몸의 변화를 살피며 건강관리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고령층에게는 디지털 기기보다 쉬운 설명과 반복적인 안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결국 ICT는 돌봄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더 가깝게 연결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건강관리는 진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건강취약계층에게는 치료 이후 관리가 건강을 좌우한다. 혈압·혈당을 확인하고 약을 제때 복용하며 식사·운동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는 같은 집합을 알고 있어도 건강관리 여건이 제각각이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분도 있지만 혼자 건강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분도 적지 않다. 몸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아파트 인허가 의혹 고강도 감찰 착수

10월까지 감찰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사기에 이어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A아파트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찰규정’에 따라 10월까지 A아파트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감찰 결과와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중점 감찰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비춰 승인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결과 통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

오소범기자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제주가 오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차량에 대해 최대 과태료 500만원(위반 3차 이상)을 부과할 방침.

이에 법 시행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에는 현장 안내를 병행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좌운철 차량관리과장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이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정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서기관(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자매 일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고병준

서기관 승진과 함께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임용을 축하합니다.

하귀형제 및 외사촌형제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 · 구독 750-2314 · 서귀지사 732-5552